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유럽 금융감독 개혁안 비준 통과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경제·재무위원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의 금융감독 개혁안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개별 국가의 예산 및 경제정책 감독,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힘.
 - 금융감독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범유럽 은행, 보험, 증권 금융감독기구들을 설립할 예정이며, 유럽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관찰될 예정임.
 - 한편 재정긴축 취지에 따라 유럽의회와 재무부장관들의 협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자국의 예산안을 유럽공동체와 다른 회원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은행세를 비롯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회원국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범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은 작년 초기 제안과는 달리 금융기관과 시장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모범감독규준과 법적구속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 2009년 3월의 금융감독 개혁안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비준된 개혁안에 따르면 범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은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만을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범감독규준이 필요한 상황이며,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금융기관 감독권이 요망되는 상황임.
- 금융개혁안이 비준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과 각국의 반응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줌.
 - 유럽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입장에서는 금번 금융감독개혁으로 인해 자국의 감독권이 축소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의 개혁안에도 미흡한 부문이 있다는 입장이며, 유럽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의 초대 의장을 맡게 되는 유럽중앙은행은 기능의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임.

(유럽의회 9/27, Financial Times 9/7)